



警大學報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Press

學訓
祖國
正義
名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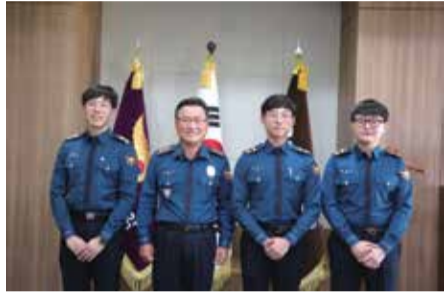
제 202호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 발행인 이상정 / 주간 최이문 / 편집장 문진수 /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 전화 (041) 968-2114 / www.police.ac.kr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변화에 대한 선제대응을 강조한 이상정 학장

2018년 7월 31일 화요일 오전 경찰대학 본관 1층에서 지휘부, 교수, 교직원, 의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4대 이상정 경찰대학장 취임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며 당시 제주지방경찰청장이었던 이상정 학장을 경찰대학장으로 내정하였다. 이상정 학장은 경상북도 청송 출신으로 1985년에 경찰대학 1기로 경찰에 입문하였다. 공직 입문 후 이상정 학장은 경북 예천경찰서장과 서울 마포경찰서장, 서울청 형사과장, 충북지방경찰청 차장, 駐중국 대사관 참사관 겸 영사 등을 역임하며 2016년 11월 제주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였다.

다만 경찰대학장 취임식 행사는 경찰대학 하계방학 도중 개최되었기에 학생들이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이에 개강 후, 2018년 9월 7일 금요일 15시 30분 경찰대학 소강당에서 경찰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학장 특강’이 진행되었다.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이상정 학장 취임 후 학장과 첫 만남의 기회를 얻었으며 학장으로부터 지휘 철학 및 당부사항, 대학 개혁 방향 등에 관한 사항들을 전달받았다. 학장은 자신이 1기로 졸업한 학교의 최고책임자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면서, 경찰대학 개혁 등의 많은 현안에 대한 큰 책임감을 느



▲ 인터뷰가 끝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이상정 학장과 학보사 기자들



▲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정 학장

끼지만 교직원 및 학생들과 소통하며 잘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상정 학장은 먼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하여 말하였다. 과거에는 능력을 통한 입신양명을 중시하여 전쟁에서의 승리 여부에 따라 그 인물이 평가받았던 반면 현재의 사회에서는 그 무엇보다 도덕성이 중요해져서 이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장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23전 23승의 전투 성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 왜 소니(SONY)사와 노키아(NOKIA)사는 과거의 위세를 지금은 떨치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은 변화에 대한 대처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면서, 학장은 경찰대학 개혁 문제, 수사권 조정 문제, 자치경찰제 문제,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수사권 조정

이상정 학장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경검 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학장이 소개한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따르면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이 1차적인 수사권을 갖고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또한 경찰은 검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영장 불청구 시에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역시 인정되며 검사는 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는 경찰비사건, 부패 범죄, 경제범죄 등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만 1차적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

이상정 학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제주지방경찰청 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실무적 경험이 풍부하다. 올해 4월 제주지방경찰청

청장은 자치경찰단과 업무협약을 하여 주민 생활 안전 활동 사무와 지역 교통 활동 사무를 자치경찰단이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주취자 처리, 교통 불편 민원 처리, 분실 및 습득 신고 처리와 같이 현장에서 종결할 수 있는 사안들을 자치경찰단이 처리하였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사안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향후 제주형 자치경찰을 모델로 한 ‘자치경찰법’이 입법될 전망이다.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제도

이상정 학장은 착안과 시행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상정 학장이 12년 전 예천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독거노인 안전 확인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였다. 그는 당시 지역 사회를 유심히 관찰한 결과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을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었다. 그는 배달망이 구축되어 있는 예천읍의 거주 독거노인 10명에 대해서 요구르트 배달원과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는 협의를 하였고 요구르트 배달원은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하며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89명의 면 단위 거주 독거노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 제도를 확대해 실시하기 위하여 예천우체국, KT 예천지점, 농업 예천군지부와 독거노인 안전 확인 제도 협약식을 맺었다.

마지막으로 이상정 학장은 학생들에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 행운이다”라는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인용하며 학생들에게 미래를 대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조언하였다. 학장이 이번 특강에서 강조한 것처럼 재학생들이 미래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

〈2학년 강윤석 기자 5800ys@police.ac.kr〉

표창원 의원을 만나
급격한 변화속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 2면에 계속



개혁하는 경찰대학, 혁신에 발맞추다

지난 7월 30일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의 발족을 시작으로 경찰대학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前 경찰개혁위원회 경찰대학 개혁 소위 위원을 비롯해 경찰대학 발전자문위원회 위원과 경찰대학 교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찰청과 경찰대학은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지난 6월 15일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한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그간 경찰대학은 개교한 이래 우수한 인재를 경찰로 양성하고, 경찰학 연구를 선도하는 등 경찰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사관학교를 모델로 한 체제가 지속되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더불어 그간의 치안환경 변화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할 필요성도 존재함을 인지하였다. 이로 인해 현 세대의 변화를 따라가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경찰대학 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개혁안은 경찰대학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관한 강력한 권고를 담고 있다. 개혁안에 담긴 권고 내용으로는 군 전환복무 폐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 개선을 비롯하여 일반대학생·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간부후

보생, 변호사 경력채용 교육의 경찰대학 통합, 현장경찰관 숙직제 도입 등이 있다. 권고안의 내용은 빠르면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개혁안을 시행함으로써 경찰대학생들이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자질과 인격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재설계하고자 한다. 또한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경찰대학이 경찰대학생 뿐 아니라 모든 중간 입직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찰교육기관으로 변화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교육기관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대학의 설립 취지는 청년 경찰간부 육성이다. 개혁을 마친 경찰대학은 그 설립 취지에 더욱 적합한 교육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 인재들을 경찰대학으로 유인 하는 방법은 경찰대학을 선택한 재학생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경찰대학 개혁에 있어서 재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경찰대학의 개혁이 학생들의 목소리가 담긴, 학생들과 함께하는 경찰대학 개혁이 되기를 바란다.

〈1학년 정다연 기자 20180075@police.ac.kr〉

줄어드는 출생아 수, 늘어나는 부실 대학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은 국가이다. 주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률은 매년 학생들의 입이 벌어지게 만든다. 반면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간간함을 쓰는 부실대학도 적지 않다. 이는 대학 정원은 큰 변화가 없는 데 비해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2019학년도 입시에서 대학은 55만 5041명을 선발하는 데 비해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57만 661명에 불과하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실제로 작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 진학자는 68.9% 밖에 되지 않았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는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오히려 4만 4800명 많아지고 2021학년도 입시에서는 그 차이가 10만 명 가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입학 정원이 미달하게 되면 대학은 경영난에 훨씬 취약해진다. 이는 교수의 연구비, 강의의 규모, 강의의 질, 교육 인프라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저출산이 심각해지지만, 대학 정원은 학생 수에 맞춰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2000년에만 해도 64만 명이던 출생아 수가 작년에는 약 36만 명으로 40% 이상 감소하였다. 특히 작년에는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052명으로 나타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8년 7월 월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치를 경신하기도 하였다. 반면 대학 입학 정원은 학생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최근 7년간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2011년에 약 67만 명이던 대학 입학 정원은 작년까지 약 10% 감소하는 데에 그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단계적인 방법을 통해 대학의 자율 개선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대학의 기본역량을 진단하여 국내 모든 대학을 평가한다. 평가는 교육 여건, 대학 운영의 건전성,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 다방면에 걸쳐서 진행된다. 진단 결과 특정한 대학으로 판정되면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된다.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되면 정원 감축을 할 필요가 없고 3년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본역량이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기본역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 받는다. 또한,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고 특수 목적의 지원만 받을 수 있다. 기본역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되면 대학은 정원 감축을 권고 받을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다.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서비스를 일부 또는 전부 이용할 수 없다.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당한 대학 중 평가 결과가 더 나쁜 대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받게 된다. 올해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총 116개교가 역량강화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대학수 (일반대학)	정원 감축 권고	재정 지원		
			일반 재정 지원	특수 목적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자율개선	120교	제외	지원 (전체)	신청가능	지원
역량강화	30교	감축 권고	지원 (일부)	제한	제한
재정 지원 제한	I 4교	실시	제한	제한	일부 제한
	II 6교				전면 제한

▲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강하고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 욕구가 매우 크다. 대학에 대한 지나친 수요가 대학의 무분별한 설립을 초래하였고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튼튼하지 못한 대학은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전국의 대학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대학은 정부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건전한 경영을 통해 교원 확보, 졸업생 취업률, 장학금 지원 수준 등의 기본적인 경영 지표들의 대한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학년 강윤석 기자 5800ys@police.ac.kr〉

돌아온 설록 흠즈, 표창원 의원을 만나다

지난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52)이 경찰대학을 찾았다. 경찰대학 교수직을 내려놓은 지 6년 만에 모교에 돌아온 그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한 강의를 준비하였다. 동시에, 경찰대학 학보사에서는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이제부터 그가 강의와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과 나눈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어 보자.

대한민국 경찰, 그리고 우리의 미래

표창원 의원(이하 표 의원)은 먼저 학생들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 그리고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시작했다. 경찰대학 리더십센터가 준비한 '경찰 선배와 함께하는 시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마련된 자리에서, 표 의원은 경찰이 걸어온 길과 지금 대한민국 경찰의 위치, 그리고 경찰대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을 골자로 한 이야기를 자신의 솔직한 경험담과 함께 풀어내었다.



▲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표창원 의원

“여러분은 경찰의 가족임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우십니까?”라는 물음으로 강의가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긍정하자 그는 긍정하는 이유를 되물었다. 학생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표 의원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겪어 온 침략의 역사를 언급하며, 그는 '우리는 침략의 역사를 겪었기에 침략과 짓밟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내용을 인용하며, '우리 민족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방종에 이르는 자유를 지양하고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었다'며 자신은 그런 대한민국의 철학이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했다.

새시대 새경찰

이렇게 '대한민국'에 관해 언급한 후, 강의의 초점은 '경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표 의원은 먼저 과거 경찰의 모습부터 살펴보았다. 그는 지난날 우리 경찰이 보였던 모습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경찰조직이 국민 대신 권력을 택한 그 영향이 지금껏 이어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현재도 경찰이 응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수사권을 얻지 못하고, 법적인 권한도 부족한 상태에 머물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본인도 1985년 경찰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그러한 질타와 비난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이야기하며, 경찰대학생들에게 '새시대 새경찰'을 만들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 표 의원은 현재의 경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지금 경찰이 혁신의 시험대 위에 놓여 있다고 말하며, 경찰이 중앙집권적 시스템과 더 큰 권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어서 망설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은 선택을 통해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고, 제복 입은 시민으로 변모하여 '국민들의 더 깊은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전,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찰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언급한 뒤, 표 의원은 30여 년 전의 자신과 닮아 있는 경찰대학생들을 위한 메시지를 던지기 시작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내야 하는 경찰로서, 미래 경찰조직을 이끌 사람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한 교훈을 주기 위해 표 의원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항

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80년대 후반 학생운동 시기를 회고했다. 그는 자신의 내적 갈등이 극심했으며, '다수의 국민이 정권을 반대하여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경찰인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 등의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했다.

그는 의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 언론인, 시민단체 등을 찾아갔고, 언젠가 들려온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의 최선을 다해달라'는 요구였다고 했다. 언젠가는 사회가 다시 안정될 것이고 그때에 다시 경찰을 필요로 하면 그때 믿음을 얻고 신뢰받으면서 치안의 버팀목이 되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것이다.

표 의원은 이때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 되어 보겠다고 발버둥치지 않았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서류에 흔들리지 않으며, 허깨비 같은 것들에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자신의 본질적인 가치와 원칙, 꿈과 지향점을 지켜내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회상했다. 따라서 그는 경찰대학생들에게도, 목표를 추구하면서 그것의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분명 의미가 있으니 자신의 삶은 자신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는 경찰대학이 현재 마주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였다.



▲ 강의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

강의를 통해 경찰대학생들에게 전해진 표 의원의 가르침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경찰대학 속에서 자신의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으리라 믿는다. 긴 시간의 강의를 통해 표 의원의 경찰조직, 사회, 국가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엿볼 수 있었다. 강의 속에 담겨 있던, 세상에 대한 이해와 인생에 대한 포부가 경찰대학생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앞날을 빛낼 재료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3학년 이상엽 기자 youplsy@police.ac.kr〉

강의가 끝나고... 표창원 의원과의 대담

강의를 마치고, 표창원 의원과 학보사 기자들(3학년 김우진, 문진수, 이상엽)은 경찰대학 본관 환담장에서 만남을 가졌다. 강의에 관해서, 또 평소 경찰대학 개혁과 관련하여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여러 물음들을 던졌고 표 의원은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해 주었다. 이하는 기자와 표 의원의 인터뷰 전문이다.

Q 학생운동의 물결 속에서 본인이 겪었던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또 하나의 급격한 변화의 시기, 경찰대학 개혁의 시기입니다. 경찰대학생들이 개혁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이때,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저의 대학생 시절과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대체 불가능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가 고도의 치안 정책 목적을 위한 존재들이라보니 바위처럼 무겁게 자리를 지켜야 하고, 그 안에서 자기 혁신의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제가 87년도에 들었던 답변의 내용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 자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냥 이 시간을 보내버리면 그건 분명한 낭비입니다. 그만큼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경찰대학생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러한 태도로 계속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 기자들과의 대담을 진행 중인 표창원 의원

Q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개혁 속에서도 저희가 경찰대학생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전통, 가치, 제도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경찰대학 졸업생들은 여태 '시민들이 경찰에게 가졌던 이질감'을 극복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항상 낯설고 어려운 존재였지만, 경찰대학이 그러한 인식을 조금씩 깨어 나가는 데에 기여했습니다. 국민들 주변의 훌륭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보면서 생긴 효과겠죠.

이렇기에 경찰대학생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자들의 집합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함부로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경찰 편만을 들고 경찰만을 위해 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우리를 여기에 보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우리 경찰대학생들만이 달성할 수 있는 전문성과 특수성은 보존해야 할 것이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어떤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가치는 확실히 배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Q 강의 중에 '경찰은 지금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이 지금 '놓아야 할 것들'에 경찰대학도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찰대학 개혁도 '경찰의 선택'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경찰대학 출신들이 경찰 내부의 기득권 세력인 상황입니다. 그들이 지배와 지휘를 하는 상황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대학 출신들이 경찰의 요직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고, 현재 상황에서 경찰대학 출신들은 '주류'와 '기득권'으로 묶여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여태까지의 업적을 치하하는 칭찬과 더불어, 이제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비판도 경찰대학이 짊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경찰은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마 경찰 조직은 경찰대학 개혁을 수용하고, 그것을 이행하고 난 후에야 경찰의 다른 분야들에 대해 당당하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솔직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대학이라는 이름, 경찰대학생에게 바라는 공적인 역할, 모두 무겁습니다. 그러나 재학생들이 항상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의 자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으로서 느껴야 할 낭만과 행복, 청춘의 활력 등을 억누르고 감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공적인 것들에만 매몰되어 버리면 나중에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우울, 강박 등 스스로의 문제들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경찰대학생 여러분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의 균형을 잘 맞추어, 청춘으로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감정을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학년 이상엽 기자 youplsy@police.ac.kr〉

가을에 펼쳐진 청춘의 한 획, 제38회 청람학술축전 개최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찰대학 캠퍼스는 축제의 열기로 가득하였다. '제38회 청람학술축전'(이하 축전)은 경찰대학 총학생회와 축제준비위원회(이하 축준위) 및 지도실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건전한 축제문화를 위한 '절주(節酒) 운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교 매점에서만 주류를 판매하였으며, 서울 왕십리역과 캠퍼스 내부를 왕복하는 차량을 운행해 외부 초청객 방문의 편의성을 높였다. 대운동장에서 축제를 진행하였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청람로(생활관 앞)에서 행사를 열었고,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인근의 푸드트럭이 경찰대학을 찾아와 학생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축제 전야제의 분위기는 한마당의 풍물놀이를 동반한 '고사제'로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후 진행된 '2018 어울림캠프 트리플RETURNS'에서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해 소통

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축제의 첫 날에는 대학생들의 화려한 '무도시범'과 더불어 예능프로그램인 '더 지니어스'를 패러디한 두뇌게임인 '경대 지니어스'와 버블슈트를 입고 치열한 축구경기를 벌였던 '버블사커' 등 여러 이색적인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 외에도 시화전, 캐리커처 그려주기, 타로점을 비롯해 사흘간의 축제에 걸쳐 계속해서 선보이는 '연일 행사'가 시작되었으며, 그 중 하나인 '푸드파이터'는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해 학생들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남녀학생들이 생활관을 개방함으로써 서로의 생활을 한층 깊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던 '오픈하우스', 물 위에 대형 풍선을 띄워 놓고 그 위에서 벌어지는 '수중 부표 싸움'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계획한 행사들이 축제를 장식했다. 오후에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동아리 학생들이 재능을 아낌없이 드러내며 역동적인 공연을 펼쳐 관

객들의 열정적인 호응을 받았다.

축제 사흘째에 계획된 여러 행사 중 하나인 '팔빙수·희망의 운동화 만들기'는 판매 수익금과 운동화를 지역사회에 기부함으로써,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윽고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여러 대학 댄스동아리와 연예인 허각, 윤하, 불빨간사춘기의 공연은 마지막 밤을 화려히 장식해 한없이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축제는 끝을 맺었다.

이번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된 데에는 대학생들의 관심과 열정은 물론, 이를 넘어선 학생 상호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나눔이 무엇보다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매년 학생들의 각고의 노력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발전하는 청람축전이 앞으로도 건전하면서도 흥이 넘치는, 경찰대학만의 특색 넘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2학년 윤성민 기자 booc12345@police.ac.kr〉

대학 학보의 침체, 위기는 현실이 된다

재학생 60%, 학보 읽어본 적 없어

‘대학 학보가 왜 필요한가?’
목소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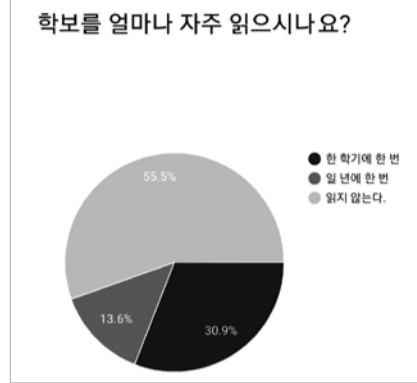
온라인 발행으로의 전환만이
살길인가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에서 그려져려 발간을 이어나가던 ‘LIFE’ 잡지는 결국 회사의 합병으로 폐간이 된다. 이처럼 2018년 현재, 다수의 대학 학보들도 폐간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경우가 많고, 그중 일부는 그 위기가 현실이 되었다. 한때는 학생 운동의 중심에 서기도 하며 대학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수행했던 대학 학보이지만, 현재는 무관심 속에서 폐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하여 대학 학보 위기의 원인과 타개책, 나아가 경찰대학 학보의 현실도 조명해보고자 한다.

대학 학보의 위기

우리 학교 재학생에게 분배받은 학보를 어떻게 하나는 질문을 하면 거울 닦기, 혹은 택배 포장재로 쓴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된다. 이는 비단 경찰대학만의 일이 아니다. 가끔 일반 대학을 거닐다 보면 배부 대마다 비치되어있는 학보는 손질이 닿지 않은 채 썩어있거나 찢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간혹 집어가는 사람들은 학보를 벤치에 앉을 때 깔개, 혹은 비가림 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지난 9월 학보사에서 실시한 ‘경찰대학 학보 인식조사(125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가 경찰대학에서 학보를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88%의 사람 중에서도 절반을 넘

는 55%가 ‘학보를 읽지 않는다’라고 답하였다. 게다가 한 학기에 한 번 학보가 나올 때마다 정기적으로 읽어보는 사람은 4명 중 1명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 경찰대학 학보 인식조사(2018)

이렇듯 실제로 학보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한 풍조 속에 춘천교대 신문은 2015년 12월 폐간하였으며, 배재대 또한 종이신문을 폐간하고 온라인 뉴스만 게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빙산의 일각일 뿐, 한서대, 목포해양대 등 많은 대학이 웹진으로만 학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 또한 임시방편적인 변화일 뿐, 결국은 폐지의 단계를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다.

위기의 원인

‘학보의 위기’라는 말은 이제 참신한 표현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90년대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위기라는 표현은 이제 대학 학보 뒤에 자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되었다. 7,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대학가의 주요한 세력 중에는 각 대학의 학보사가 있었다. 기존 신문이나 TV 등의 언론매체가 정권의 날선 검열을 받으며 통제받을 때, 비교

적 독립적 지위에 있었던 대학 학보는 젊은 세대의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학생 운동의 쇠퇴와 맞물려 학보의 의견 결집 기능도 약화되었으며, 학보 자체의 영향력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대학생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학보가 지금까지 몰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과 종이 매체의 한계에 있다. 경찰대학의 경우 학보를 기획하고 발행하기까지 길게는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빠르게 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시의성 있는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기는 어려운 시간이다. 실제로 ‘경찰대학 학보 인식조사’에서 학보를 읽지 않는 사람 중 그 이유가 ‘학교 일은 학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인 비율이 33%를 차지하였다.

더욱이 학생 커뮤니티, 대나무 숲 등의 학생들 간 이슈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신속하고 광범위한 장이 충분히 마련됨으로써, 학보의 언론으로서 기능 중요도가 현저하게 떨어져 가는 상황이다. 학교 내부 및 외부 소식에 대한 문제 제기, 또는 소식 전달의 역할이 공유성과 익명성, 그리고 신속성을 모두 갖춘 SNS 및 전자 매체에 종이 신문이 뒤처지기 때문에 더는 종이로 신문을 발행하던 기존의 방식으로 경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듯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쳐왔던 전통적인 주간지인 ‘타임지’와 ‘뉴스위크’도 현재 여러 주주에 의한 매각과 매입을 거듭하며 폐간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미 종이

신문으로 인한 적자는 가시화되어 발행 부수를 줄이며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거처더라도 신문으로서 존속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모바일로 인터넷뉴스를 보고 있는 시민

학보의 미래

그렇다면 종이 학보의 폐간과 웹진 등의 온라인상 학보로의 전환이 학보의 진정한 구제책으로서 기여할 수 있을까. 김도훈 허프포스트코리아 편집장은 수많은 한국 잡지의 폐간을 지켜보며 ‘잡지는 사라질 수 있다. ... 콘텐츠는 남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은 종이로 발행되는 기존의 언론 방식은 점차 쇠퇴함을 막을 길이 없더라도, 이제껏 종이라는 형식에 담겨왔던 인류의 콘텐츠는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Y 대학에 다니는 오승호(22) 학생은 “딱히 학교 신문을 봄으로써 얻는 이득이 없다. 학교 소식도 학교 SNS에 다 나와 있고, 신문에 있는 소식들은 학생의 입장에서 ‘tmi’(too much information)의 줄임말,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함을 의미함’일 뿐이다”라

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경찰대학에 다니는 정지원(가명, 21) 학생 또한 “학보를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귀찮기도 하고, 읽고 싶은 동기가 별로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들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종이 학보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만이 대학생 언론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공유성과 신속성에서 뒤처져있던 종이 신문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대학 학보 인식조사’에 따르면 학보를 읽는 이유 중 75%가 ‘재학생 기자들이 직접 쓴 글이기 때문’에 높은 응답률을 차지하였다. 이는 경찰대학의 학보가 재학생들에게는 소식 전달의 창구보다는, 재학생 간 소통의 수단으로 더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용적인 면에서 ‘경찰대학을 같이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라는 의미에 중점을 두어 학보를 구성하는 것도 학보 개편의 좋은 방향 중 하나가 될 듯하다.

이에 더하여 기존의 종이 신문 판형에 갇혀있던 학보에서 영상 뉴스나 카드 뉴스 등의 제작을 통하여 매체의 전환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단순한 매체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학보사에서 학보를 발행하며 담아냈던 세밀함과 정확성을 갖춘 대학 언론의 정신을 충분히 녹여낼 수 있다면, 무관심 속에 스러져 가던 대학생 언론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2학년 안준호 기자
ahnjuno96@police.ac.kr〉

젠더 갈등을 넘어 타성 혐오로... 화합의 길은 어디에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 시기를 찾으려 하면 2018년일 것이다. 올해 초부터 지속한 해화역 시위와 양예원 논란, 그리고 ‘82년생 김지영’ 영화화 이슈와 계속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을 통해 페미니즘은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끌기도, 때로는 각 성별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사회는 타성을 혐오하는 이른바 ‘혐오 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과연 페미니즘이란 왜 논란이 되는 것이며, 양성 간의 틈은 계속 벌어지지만 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페미니즘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전개된 투표권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현재에 이르러서 페미니즘은 사회의 변화를 넘어 여성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국내에서의 흐름도 이와 유사하다. 국내 여성운동은 1970년대 노동자 운동을 통해 등장해, 1980년대에는 사회에서의 성차별, 성폭력, 성매매 철폐를 위해 소리를 냈다.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대에는 성소수자, 여성장애인, 이주여성 등 소수자 주제들도 수면 위로 등장

했다. 이렇듯 여성 운동은 우리 사회의 남성 권위주의 탈피를 위한 긍정적인 갈등을 이끌었다. 그렇다면 ‘갈등’을 넘어선 ‘혐오’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시작된 여성혐오... 현재는 사회 전체로 확산 중

2000년대 후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혐오 게시물들이 올라오면서 관리자들이 이를 삭제하기 시작했고, 이에 반발한 누리꾼들이 자극적인 게시물들을 보관하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것이 일간 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의 발단이다. 일베는 2010년경 개설된 이후로 활발히 활동했는데, 자극적이고 혐오적인 게시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 혐오성 게시물로 논란을 빚는 커뮤니티 사이트들

일베는 정치, 사회, 문화를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움직였지만, 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여성혐오였다. 2012년 한 교사가 초등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한 게시물을 올려 사회의 공분을 산 적이 있으며,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고, 된장녀, 김치녀 등 한국 여성을 혐오하는 표현이 난무하는 등, 일베는 혐오 문화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디어를 통해 혐오 표현이 빠르게 확산되어 적지 않은 수의 남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6년 실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성 응답자 중 이러한 혐오 표현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54.2%였다. 이중 청소년은 공감하는 비율이 66.7%나 되어 여성혐오가 지속될 것임을 우려하게 하였다.

2015년경부터 폭발적으로 논란된 남성혐오... 자극적인 방식으로 관심 끌어 모아

그렇다면 남성혐오의 뿌리는 어디일까.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일부 언론에서 메르스 확진자와 같이 비행기를 탄 한국 여성 2명이 격리를 거부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는 오보였지만, 인터넷 상에서 수많은 누리꾼들이 여성혐오적 발언을 하게 만들었다. 이에 분노한 여성 누리꾼들이 지

금까지 이루어졌던 여성혐오 표현들을 주체만 바꾸어 보여주는, 이른바 미러링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커뮤니티에서의 누리꾼들의 활동은 점차 거세졌고, 메르스 갤러리의 명칭과 여성주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의 제목이 합쳐져 ‘메갈리아’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게 되었다.

이들은 소라넷 폐쇄, 몰카 근절 캠페인 등 긍정적 영향을 사회에 주기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극단적인 남성 혐오 행동을 했다. 결국 남성 혐오 주의자들은 ‘위마드’라는 사이트로 독립했고, 메갈리아는 차츰 힘을 잃어 2017년 폐쇄되었다. 위마드는 이후에도 태아 살해, 가톨릭 성체 훼손을 사이트에 인증을 하거나, ‘한남충’ 같은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등 수위 높은 혐오성 행위를 보여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른 성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개인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

현재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인 조혜정 교수는 이러한 상호 혐오 행위에 대해 “남녀가 한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서로를 남자 여자라고 인지하기보다 같은 사람으로 인지하면서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혐오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동료가 될 수 있도록 다양성 교육을 시켜야 하고 남자와 여자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모두가 한 개인이자 시민이자 개성 있는 존재로 인지되어야 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인식과 태도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 이전에 시민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보고하고 돌보아야 한다. 타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밝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에서는 현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개의 양성평등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이다. 이러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노력 및 관련 범죄 처벌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진행형인 혐오는 다른 아닌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도록 다른 성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학년 지민혁 기자
20180086@police.ac.kr〉

위계질서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나라의 위계질서 문화의 실태

우리나라의 위계질서 문화는 전통적으로 유교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경직된 모습을 보여준다. 실제로 '갑과 을, 끈대, 갑질'과 같은 단어들 유행하고 있으며,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퇴사율이 높다는 점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위계질서 문화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대한민국 검찰의 경우, 기수제 문화가 매우 뚜렷하여 후배 검사가 선배 검사를 앞질러서 승진하면 그 선배 검사는 반강제적으로 퇴직해야 하는데, 이러한 관행을 '용퇴'라고 한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화는 드러나는데, 단적인 예시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도지사님' 사건이 유명하다. 긴급전화인 119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소방관이 용건을 묻자 계속 자신이 도지사라는 것을 강조하며 관등성명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 직후, 전화를 받은 두 소방관은 소방본부에 의해 해임되었다가 다음날 이에 대한 여론의 질타로 인해 복직되었다. 자신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관은 자신의 아래라는 잘못된 인식이 불러온 사태라고 평가되고 있다.

군대에서의 위계질서 문화

군대는 짬밥, 압존법, 기수제, 풍군기 등의 말들이 탄생한 곳이다. 군대에서의 상명하복과 위계질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변질된 것을 '풍군기'라고 칭한다. 하급자의 상급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이 '풍군기'는 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에 의해 퍼져나가 일부 대학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가정에서의 위계질서 문화

변질된 유교 문화는 가정생활 중 위계질서 문화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임진왜란 이후로 심해지기 시작한 남존여비 사상이 득세하면서, 가부장제와 성차별적 문화가 심해졌다. 이런 현상은 현대에도 그 잔재가 남아, '육아와 가사는 여자가 한다' 등의 관념



▲가정에서의 가사노동 분담 (출처: 동양출판)

으로 존재하고 있다. 추석 명절마다 나오는 명절 가사노동 문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명절마다 부각되는 가부장제 문제는 가정에서의 위계질서 문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기업 내의 위계질서 문화

우리나라의 기업문화는 전통적으로 위계질서가 뚜렷한 경향을 보였지만,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1994년까지만 해도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근무해야만 하는 연공서열제를 채택하였으나, 1995~1996년경부터 성과연봉제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연공서열제의 잔재는 남아 있다. 서구권 국가의 경우, 능력만 있다면 입사한지 몇 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이 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경력이 많이 쌓여야만 한다. 이러한 연공서열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승진하는 것을 막고 동기부여를 감소시키며, 창의적인 경영을 어렵게 하여 현대 기업에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위계질서를 탈피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부장님', '과장님' 등의 호칭

을 없애고, '프로', '씨' 등의 호칭으로 대체하고 있다. CJ와 같은 다른 일부 기업들도 이를 도입했으나,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위계질서 문화의 개선 없이 호칭만 바꾸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 내 위계질서 (출처: 서울경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물론 위계질서를 무작정 없애려고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실제로 '부장', '과장' 등의 호칭을 '님', '매니저' 등으로 바꾸어 부르는 소위 '호칭파괴'가 도입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에 대한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인

이 기업 962개를 대상으로 '기업 내 직급 및 호칭파괴 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호칭파괴 제도'가 효용성이 낮다고 응답한 기업이 65.4%나 되었다. '호칭파괴 제도' 도입을 한 기업은 11.6%에 불과했고 도입을 하지 않았거나, 도입을 했어도 다시 직급 체계로 회귀한 기업은 88.3%였다. 실제로 호칭파괴 제도를 도입한 기업(112개사)의 25%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또한 도입하지 않은 기업(822개사)의 83.3%는 향후에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호칭파괴 제도가 위계질서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에 호칭파괴를 무작정 도입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말해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나이가 어리거나, 직급이 아래라고 해서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 하급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학년 옥재안 기자
royohk98@police.ac.kr〉

위계질서, 사라져야만 하는 비합리적 문화인가?

많은 창업가들과 전문가들은 위계질서 구조가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계라는 것은 인간이 이루는 모든 조직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은 올바른 위계질서구조가 조직이 작동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바람직한 위계 구조는 강한 의견 충돌로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조직이 분열 위기에 빠졌을 때에 이를 극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2017년 MIT Sloan Management Review의 가을 호에 실린 연구 보고서 "The Truth about Hierarchy"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위계구조가 수행하는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을 밝히고 있다.

위계 구조의 중요한 기능 세 가지

첫째, 위계 구조는 조직 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경계선을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위계 구조는 아이디어 구상에 있어서의 척도와 목표를 설정해 줌으로써 구성원들의 집중을 올바른 방향으로 모아준다.

둘째, 위계 구조는 아이디어를 정제하는 역할을 해 준다. 아이디어 구상 초기의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가능성들이 나온다. 다양한 구성원 개개인의 색깔 때문에 수많은 아이디어 중 주력할 아이디어를 고르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위계 구조는 초기 목표를 잊지 않고 제시된 아이디어들 중 어떤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지원할지, 어떤 아이디어를 걸러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위계 구조는 구성원이 제 목소리를 내는 데에 오히려 도움을 준다. 토의 과정에서는 다수의 의견과 반대되거나 익숙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는 우려 등의 위험성을 수반한다. 바람직한 위계 구조 하에서 조직은 타인의 눈치를 덜 의식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게 되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결국 바르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위계질서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것은 그 기능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위계 구조들이 잘못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 내에서 권한을 가진 리더들이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잡아주고 그 안에서 구성원끼리의 자유로운 토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위계 구조는 제 기능을 다한다. 하지만 수많은 조직의 리더들은 잘못된 권위 의식에 빠져서 구성원들에게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하고 있고, 이는 조직의 창의성을 억누르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런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의 상위 층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합리한 권위 의식에 빠지지 않고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끊임없이 성찰해 보는 자세가 현대의 리더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바일 것이다.

〈1학년 박경세 기자
20180032@police.ac.kr〉

노성훈 교수 인터뷰 경찰은 제복을 입은 시민,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야



▲경찰대학 행정학과 노성훈 교수

경찰대학 리더십 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18일, 기존의 인성리더십 센터에서 경찰대학 리더십 센터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개편된 리더십 센터는 기존 프로그램의 강화와 청람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역량과 인성을 개발하는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내의 위계질서 문화에 대해 평소 가지고 계신 생각이 궁금합니다.

경찰대학의 급격한 개혁에 따라 학교 자체의 체질에 불가피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대학 내부의 위계질서 문화 역시 개선되지 않으면 경찰대학 내·외부의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위계구조 문화 개선 자체에 대한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연차가 크게 의미 없는 어린 나이부터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입학 년도 때문에 엄격한 위계질서 안에서 갇혀있는 것은 정당성이 다소 떨어집니다.

또한, 현재 사회가 요구하는 경찰

상은 '제복을 입은 시민'입니다. 흔히 우리는 경찰 대학 교육의 방식이 '제복'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의 본질은 제복이 아닌 시민입니다. 자격과 능력을 갖춘 시민들에게 제복을 입힘으로써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본질인 시민 교육을 잊고, 너무 '제복인'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계급에 따른 위계 구조에 적응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개혁에 맞추어 그동안의 제복, 계급, 기수 중심의 위계질서 문화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에 맞추어 경찰 대학 내의 위계질서를 개선해 나갈 구체적인 방향성이 있다면?

외부에서 경찰대학을 바라본 시선은 경직적이고, 수직적으로 내부에서 우리가 본 모습과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경찰대학 내부의 문화와 교육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외부의 시선 중 몇몇 부분들은 수긍이 갑니다. 우선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교육은 앞서 말한대로 '시민'에 맞춰질 계획입니다. 3년간의 충실한 '시민 교육'을 받고난 후 4학년 때 비로소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시민들을 보호할 자격을 갖추게 됨을 인정하고, 경찰 실무 교육을 이수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기존의 위계질서를 개선하고 시대가 원하는 경찰을 키워내기 위해 학교가 취해야 할 교육의 방향성이라 생각합니다.

청람교육 전면 개편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기존 청람교육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새로운 청람교육에서 재학생들

을 배제할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청람교육은 학생들의 사고를 정형화시켜 학교 내의 위계 구조에 대한 거부 반응을 미리 제거하는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리더십 센터는 이러한 병폐를 개선하여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우고, 경찰리더의 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해주는 일종의 리더십 함양 캠프처럼 운영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려되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여 해결하는 새로운 청람교육을 완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위계라는 구조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가 개혁이 된다고 해도 선후배 관계가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존재하게 되는 위계는 단순히 기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배다운 역량과 자격을 갖추어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인만큼 선배가 되면 뭘 하지가 아니라 어떤 선배가 될지를 고민해서, 기존의 경찰대학의 위계 문화를 개선하고, 존재하는 위계가 순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대학 개혁의 주축은 리더십 센터도, 개혁위원회도 아닌 학생입니다. 강조했던 대로 '제복을 입은 시민'의 본질과 의미를 살려서, 학교도 학생도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성장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1학년 박경세 기자
20180032@police.ac.kr〉

교수 기고

경찰대학(警察大學)과 경찰학(警察學)



박종철 교수

現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올 초 대학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중 1위는 '파사현정(破邪顯正)', 2위는 '해현경장(解絃更張)', 3위는 '수락석출(水落石出)'이었다. '파사현정'은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냄을 뜻하며, '해현경장'은 거문고의 줄을 바꿔 맨다는 의미로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수락석출'은 물이 빠져 줄어들자 바닥에 있는 돌이 드러남을 의미한다. 대학 개혁이라는 큰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서 위 세 가지 사자성어가 주는 의미가 가슴에 깊이 오랫동안 남는다.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대학에 권고한 사항 중 경찰학과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을 접했다. '경찰학과' 내에 소속 학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학과'를 폐지하고 학과 명칭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경찰대학은 지난 1980년 설립되어 올해 38기 신입생이 입학할 때까지 줄곧 경찰학의 위상 제고(提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지난 시절을 돌아볼 때 경찰대학의 많은 공과가 있었지만, 대학의 존재만으로도 외부에서의 경찰학의 학문적 평가는 대단히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찰학과는 경찰 실무와 학문의 올바른 융합을 위해 경찰실무에 능통한 자 중 박사급의 인재를 선발, 경찰관 교수로 보임하여 강의와 연구를 오랜 기간 실시해왔다. 그 결과 경찰학 분야에서만큼은 경찰대학이 가장 많은 연구를 하는 기관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교수 선발 요건은 경찰대학 뿐 아니라 각 군 사관학교 및 공무원인재개발원 등 각종 기관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더구나 경찰학과 교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 실무적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

해하고 학문을 올바르게 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응용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1조는 경찰대학의 설치 목적에 대해 '국가치안 부문에 종사하는 경찰간부가 될 사람에게 학술을 연마하고 심신을 단련하게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가 치안 부문의 학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경찰학(警察學)'임을 위 법의 목적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권력기관 관련 분산 측면에서 경찰대학 개혁이 강도 높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의 논의 과정을 보면 대학의 외부적 제도 문제 개선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필자는 개혁의 방향이 대학 전반의 문제를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점에서 개혁의 우선은 '파사현정, 해현경장'과같이 대학의 올바른 방향을 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현재 경찰대학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각은 바로 '수락석출'의 모습 그대로다. 드러난 돌에 새로운 물을 붓고 경찰학의 산실(産室)이자 허브(hub)로서 경찰대학의 지향점을 정해야 한다. 경찰학의 강의와 연구를 경찰대학의 경쟁력으로 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융합학문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대표적인 국가대학으로 성장해야 한다.

비유는 버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움을 취하려면 반드시 비움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비움과 새로움은 전혀 반대의 의미가 아니며, 이는 둘로 아니다. 경찰대학(警察大學)과 경찰학(警察學), 이것은 절대로 나뉘질 수 없는 운명체로서 상호 조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이 시대 경찰대학 개혁이 주는 메시지다. 무심한 듯이 지나치고 싶지만, 이것을 지나치면 절대 안 될 것 같다.

경찰학과 박종철 교수

2020년 자율주행시대, 한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자율차') 시장에 수많은 기업이 뛰어들고 있다. 점점 레드오션이 되어가는 시장, 이대로 간다면 교통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은 이미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자율차에 대해서 교통공학박사인 김남선 연구관과 함께 알아본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남선 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김남선 연구관입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 내에서 치안정책과 치안기술을 연구·개발·관리·분석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저는 분청 교통국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와 자율주행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자율차의 개발 현황에 대해 알려주세요.

넓게 봤을 때는 미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율차의 자율주행 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지표는 없지만 대체로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에서 내놓은 5단계 기준을 많이 따르고 있는 데요. 현재 상용화된 차량에는 2~2.5 단계의 기술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2.5단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평가의 지표가 모호하기 때문에 명확히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한국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Automated Driving) 기술 단계

구분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SAE	운전자 보조	부분적 자동화	조건부 자율주행	고도의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NHTSA	단일기능별 자동화	기능 복합적 자동화(ADAS)	제한적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출처: AUVSI 2014, San Francisco

▲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단계 분류 기준

입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어떤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술에 관련된 법은 보통 해당 기술이 개발, 적용되면서 사후에 입법화되어 작동하는데, 자율차의 경우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차량 약 2,180만 대가 등록되어있고 3,166만 명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자율차가 상용화되면 바로 상당수의 자율차가 도로로 나올 가능성이 큼니다. 자율차 도입 초기에 자율차와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이하 '일반차')가 섞여서 운행되면 사고가 날 경우 자율차와 일반차 간의 사고일 가능성이 높아서 자율차를 대상으로 하는 법만을 만들면 같이 사고가 난 일반차에 적용될 법률의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은 나중에 생기지만 자율차 관련법은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고, 그런 필요에 부응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거나 여러 정부 부처가 협업하여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요.

일단 우리나라의 자율차 관련 부처는 경찰청,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총 네 곳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두 개의 연구를 이미 완료했고, 현재는 향후 자율주행 로드맵을 도출해내기 위해 '자율주행시대 대비한 경찰의 추진전략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율주행 패스트트랙'이라는 과제가 3년간 207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패스트트랙은 앞서 말한 4개 부처 모두에서 진행되는데, 도로와 그 부속 시설물에 관한 것은 국토교통부, 센싱, 정보통신 등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량에 관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운전면허, 단속, 사고, 도로의 운영에 관한 것은 경찰청에서 맡게 됩니다.

패스트트랙 이후에는 정부 부처가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규모 5,000억 원 이상의 예비타당성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자율차의 상용화 목표 시기를 2020년 경으로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시대에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자율차가 안전하게 도입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현재 교통사고의 95% 정도는 인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자율차가 도입되면 교통사고의 95%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이고,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목표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율차의 해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납치·살인사건 등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서 진짜로 자율차가 사립보다 안전한지 검증하는 것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정리하자면, 경찰이 하는 일은 결국 교통의 운영과 단속 등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자율차가 도입된 이후에도 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 경찰이 맡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학년 채정현 기자 hyun4331@police.ac.kr)

송도 불법주차 사건, 질서 유지에 성역이 있나

지난 8월, 인천 송도에서는 아시안 게임 못지않은 뜨거운 논란거리가 있었다. 바로 송도 불법 주차 사건이 그 주인공이다. 송도 불법 주차 사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주민 간의 갈등이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번져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으로, 특히 차주의 반응과 아파트 주민들의 대응이 시시각각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전해짐으로써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이끌었다. 결국 차주가 차량을 판매하고, 사과문을 올린 뒤 이사를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 송도 불법주차 차량 (출처: 연합뉴스)

공동주택에서 주민 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사건에 공감하였고, 이제 불법 주차차량의 견인이라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교통법적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현재 대한민국에서 불법 주차차

량의 정의는 무엇이고,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또한 송도 불법 주차 사건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토록 갈등을 일으켰는가.

도로의 인정 기준

우선 도로교통법의 시각에서 도로라는 것의 정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 불법 주차차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이다. 이 정의에서 논쟁거리가 되는 것은 뒤의 한 가지 일반조항이다. 위 일반조항은 도로의 조건으로 이용성, 도로형태, 공개성을 말하고 있는데, 공개성의 측면이 도로교통법의 시각에서 도로를 인식하는 핵심이다. 경찰대학 이상엽 교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판단 시 일반조항에서 공개성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아파트의 정문에 차단기의 여부, 아파

트 출입 시 출입증 소지의 여부에 따라 공개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사유지라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불법 주차차의 판단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식되는 곳에서 불법 주차차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것인가. 이상엽 교수에 따르면, 불법 주차차의 정의와 단속, 조치는 모두 도로교통법에 적시되어 있다고 한다. 만약 도로교통법상 도로인 곳에 주차차했을 경우, 2가지 기준에 따라 불법 주차차의 여부가 판단된다. 첫 번째, 주차할 수 있는 장소인가. 두 번째, 적절한 방식으로 주차하였는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는 주차할 수 없는 구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통 도롯가의 노란색 실선이 그 구역을 나타낸다. 따라서 금지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 주차되어있는 방식에 상관없이 불법 주차로 판단된다. 또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에 주차했다라도 주차의 방식이 교통의 흐름에 상당한 장애를 유발한다면 주차 방식의 문제로 불법 주차로 판단된다. 위 두 규제가 해당하여 불법 주차로 판단된 경우, 경찰관의 차량 이동 명령이

있을 수 있고, 차량 소유주 혹은 차량 관리인이 근처에 있지 않다면 경찰관이나 구청 직원의 단속 하에 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다.

송도 사건의 분석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의 시각에서 어떤 주차가 불법 주차인지, 또한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송도 불법 주차 사건을 교통법적 시각에서 분석해보겠다.

우선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판단한 바로는, 사건이 아파트라는 사유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주민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이에 관리규약 준수에 따른 문제로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이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없었고, 사인과 사인 간의 갈등 해결이 사건의 해결방법이었을 것이다. 이미 사건의 명칭이 '송도 불법 주차 사건'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는 언론사에서 해당 차량이 주차된 방식이 사회 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방식이기에 통용되는 불법 주차의 의미를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일반조항의

해석에서 공개성의 해석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아파트와 공동주택과 같은 사유지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판단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가 정문에 차단기가 없었고, 평소에도 출입증 없이 아파트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면 아파트의 도로가 평소에도 공개성을 띠고 있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상황에 해당 차량의 주차는 주차 방식에서 심각한 차량 흐름의 장애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불법 주차 차량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대해 두 번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경찰의 초동대처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파트라는 이유로 즉각 사유지로 판단해 견인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경찰은, 그리고 공권력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발전해왔다. 공권력의 개입이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초동대처가 명확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개성의 판단기준이 뚜렷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1학년 김규연 기자 20180004@police.ac.kr)

'자존감 열풍' 어디에서 불어왔나?

지금의 뜨거운 화두 중 하나는 자존감이다. 자기계발 서적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최근 들어 심리학·자기계발 분야에서 자존감에 관련된 서적과 강연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윤홍균 원장의 '자존감 수업'은 30주 넘게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고가 후미타케와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에서부터 시작한 아들러 심리학의 인기도 자존감 열풍의 맥락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자존감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뭘까? 사실 자존감은 이전에는 없다가 갑자기 생겨난 개념이 아니다. 자존감이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개인은 항상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고, 개개인에 따라 자존감이 높기도 낮기도 했다. 그런데도 최근 들어 자존감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에는 여러 사회 현상들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김대형 심리학자의 '짜자 자존감 관하는 사회'를 기반으로 그 현상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소에 따르면 은퇴자 중 73%가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 그렇기에 은퇴자들도 일자리를 찾으려고 열심히이다. 청년층과 마찬가지로 자존감의 문제를 겪기 쉬운 환경에 처했다.



▲ 세종시 취업박람회서 구인정보를 찾아보는 구직자들 (출처: 연합뉴스)

학벌주의

최근 몇몇 기업에서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등 학벌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려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기는 하나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학벌이 큰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H대기업은 이번 하반기 공채 과정에서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등 7개 대학만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서류합격 혜택을 주었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학벌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한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고졸자의 임금을 100이라 보면 대졸자의 임금은 149로 임금격차가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점과 대학진학률이 82% 정도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점은 한국 사회에서 학벌이 중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학벌주의가 만연하면 능력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지 않고 학교의 이름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되면 대학 입학 이후 쌓은 자신의 경력과 능력과 노력이 부정당하는 결과가 되어 청년들의 자존감을 위협한다.

취업난

한국의 유효구인배율은 6월 기준으로 0.66배다. 즉 100명이 66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지난달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실질적인 실업률인 청년 확장실업률은 23%까지 치솟았다. 취업난이 심각하니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자신이 가진 스펙과 학점이 부족하거나 하는 자괴감과 또 다른 스펙에 대한 고민에 시달린다. 이런 상황은 한국 청년들의 자존감을 위협하고 있다. 청년들만 취업난을 겪는 것이 아니다. 100세 시대가 접어들었지만, 평균 은퇴 연령은 60세를 조금 넘는데, KB금융지주 금융연

물질만능주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웃음 뒤에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부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말이다. 요즘 한국 사회는 돈이면 안 되는 것들이 거의 없다. 그래서인지 다들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가파르데 소득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점점 더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기존에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자산을 가지기 힘들어지고 있다.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취업조차 어려운 청년층에게 이러한 각박한 경제적 현실은 좌절감과 함께 자존감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개인들의 파편화

사회가 각박해지고 개인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연대의식이 약해졌다. 취업난에서 볼 수 있듯 공생하는 윈-윈 게임이 힘들어지고 적자생존의 제로섬 게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대하기가 힘들어졌다. 또한 부의 양극화 때문에 나 하나 건설하기도 힘들어 타인까지 신경 쓸 여유도 없다. 이렇게 연대의식의 상실과 개인주의의 탄생은 '홀로' 문화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젊은 세대가 주로 거니는 거리를 중심으로 혼밥 식당이 다수 탄생하고, 편의점에서 혼밥 메뉴를 쉽게 살피볼 수 있다. 또한 CGV에 따르면 1인 관객 비중은 2012년 77%에서 2016년 13.3%까지 늘었다. 이렇게 개인들이 파편화되면서 서로 존중해

기 어려워나 나라도 나 자신을 존중해야만 살 수 있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현상을 비롯한 여러 사회 현상 때문에 자존감 열풍이 불었다. 자존감 열풍은 절대 나쁜 현상이 아니다. 개인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개인이 건강해진다면 개인이 모인 사회 역시 건강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개인만 서적을 읽고 강연을 보는 등의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학벌주의와 물질만능주의 등 자존감을 갉아 먹는 부조리한 구조가 없는 건강한 방향으로 바꾸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김천휴게소에 마련된 혼밥존에서 혼밥하는 사람들 (출처: 연합뉴스)

<박상미 교수와의 특별 인터뷰>
괴로운 기억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괴로운 기억에서 벗어날까요?
 우선 과거의 기억을 객관화해 보세요. 과거의 기억을 객관화해보면 생각보다 별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왜곡되고 과장됩니다. 기억과 과거의 사실은 전혀 다를 수도 있고 매우 과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일들을 꾸준히 성취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계속해서 객관적으로 경험한다면 자존감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인 방법으로써 감사일기와 칭찬일기를 매일 꾸준히 작성한다면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나요?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어서 자존감이 올라간다면 우선 얼굴이 밝아집니다.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고 친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도 쉬워지고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또 올라갑니다. 이게 자존감의 선순환입니다.

자존감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자존감은 누구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자존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존감은 내 안에서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자기 수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또 나를 칭찬함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말고 우선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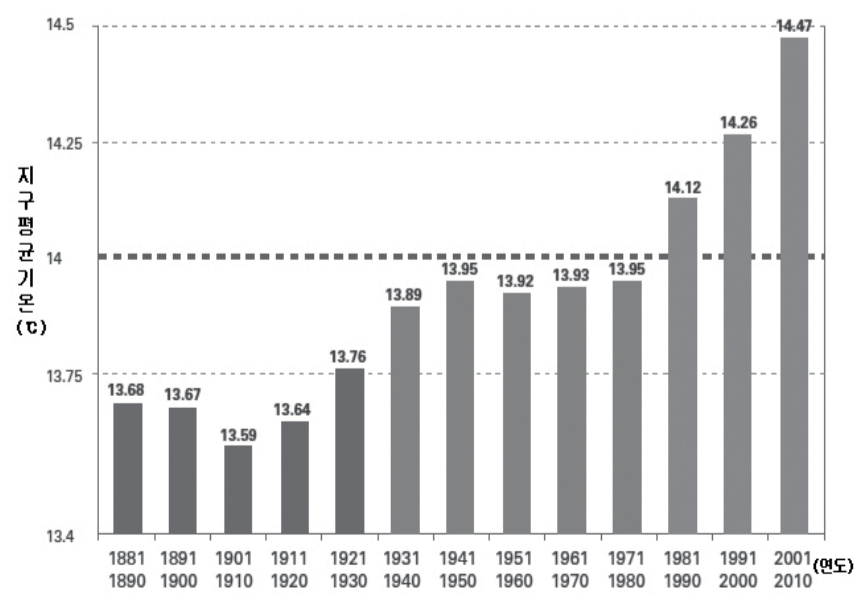
<2학년 권준수 기자
soon9624@police.ac.kr>

현실로 다가오는 재앙, 지구온난화

2018년 여름 대한민국을 강타한 폭염은 근대적 기상 관측이 이루어진 1907년 이후 최대의 폭염일 수를 기록하며 큰 피해를 남겼다. 기상전문가들은 이런 이례적인 폭염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꼽았다. 지구온난화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의 평균기온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화석연료의 사용 이후 급격히 가속되어, 19세기 후반 이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약 0.5℃ 증가하였고 점점 평균기온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승한 바다는 태풍을 일으키기에 좋은 환경을 만든다. 태풍은 고온으로 인해 팽창된 대기가 외부와의 압력 차이 때문에 상승기류를 형성하여 만들어진다. 이때, 따뜻해진 해수면은 태풍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여 태풍의 강도를 세어지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는 지난해 대서양에서 6개의 허리케인이 풍속이 시속 111마일(179km) 이상인 '카테고리 3' 강도를 넘어섰다고 발표하였다. 1981-2010년 한 해 평균 3개의 허리케인이 '카테고리 3'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강도가 점점 세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비단 기상이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2018년 8월 9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충 문제 때문에 곡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온도가 오르면 해충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더 많은 식물물을 섭취하기 때문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이 2℃가량 상승하면 현재 해충에 의해 손실되는 곡물의 양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2015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파리기후협정을 체결하여 2100년까지 기온 상승을 1.5℃까지 제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헨크 데이크스트라(Henk Dijkstra) 연구팀은 인류가 매년 2%씩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수 있다 해도 2035년에 기온상승이 평균 2도를 돌파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1990년대 말 이후 3.6%에 그칠 정도로 느리게 성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이 시기는 훨씬 앞당겨진다. 불안정한 기후 상황 속에서 인류의 현재와 미래 모두 위협받고 있는 지금,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각국의 협력과 대처가 필요할 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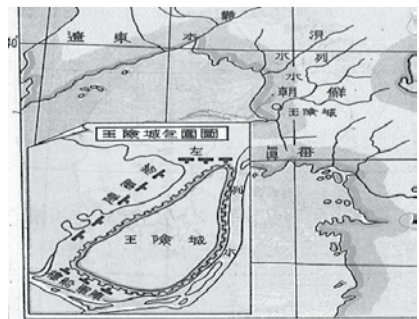
<1학년 이진홍 기자
20180063@police.ac.kr>

고조선의 수도를 찾아서

지난 10월 3일은 4351번째 개천절이었다. 단기 4351년,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의 기원인 고조선의 수도 위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평양설과 이동설

통설의 왕검성 후보지는 대동강 북쪽의 평양성 터이다. 문헌사학계에서는 고조선과 한의 전쟁을 다룬 「사기」의 조선열전을 해석해 왕검성의 위치를 추정한다. 책에서 묘사하는 왕검성 주변 지형이 평양성 주변 지형과 유사하다. 고고학적으로도 고조선 멸망 이후 설치된 낙랑군의 유물이 평양성에서 발견된다. 이동설은 연의 고조선 침공을 이유로 수도가 요동지역에서 평양으로 이동했다는 설이다.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은 고조선 문화권을 대표하는 유물들로, 세형동검의 연대가 비파형동검보다 늦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비파형동검의 분포지역이 요동지역이었다가, 세형동검의 분포지역이 평양 이남으로 바뀌었다.



▲ 평양, 과연 고조선의 수도였는가? (출처: 국사대관)

요동반도설

그러나 최근의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 위의 두 가지 설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 평양성에서 낙랑군 이전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고, 평양성 외성 성벽의 지층이 쌓인 순서를 분석한 결과 고구려 이전의 축성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동설의 경우, 세형동검이 연의 대형동검에서 출토되며 세형동검문화와 비파형동검문화의 연대가 서로 멀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어 힘을 잃는 추세다. 영남대학교 정인성 교수는 고조선 식 동검 문화와 중국 전국시대 문화 요소가 결합한 세족리-연화보 문화가 위만조선의 고유한 서민 문화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된 유물들이 요동반도의 성곽들에서 발견된다는 점을 들며, 성곽을 중심으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고조선의 수도를 찾아서

하지만 요동반도설을 지지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위치도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요동지역과 북한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실물자료를 얻기 힘든 탓이다. 하지만 중국의 계속되는 역사왜곡에 굴하지 않고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족의 뿌리인 고조선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1학년 박준우 기자
20180036@police.ac.kr>

경찰청 인권센터, 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 경찰의 아픈 손가락 중 하나인 남영동 대공 분실. 이곳에는 현재 경찰청 인권센터가 들어서 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이곳의 이야기를 경찰청 인권센터 인권보호담당관실 이준형 경감에게 들어보았다.



▲ 경찰청 인권센터 인권보호담당관실 이준형 경감

영화 '1987'의 인기와 더불어 영화의 배경인 남영동 대공 분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당시 대공 분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대적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시기였어요. 국민들이 요구하던 것은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직접 선거인데, 그조차도 해당 사항이 없었던 시대였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있었던 역량이 있었던 시기였음에도 그게 쿠데타로 인해 무산됐어요. 그러다 보니 신군부 집권기는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개헌 요구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시기였죠. 그러한 것들이 87년의 박종

철 고문치사 사건 등으로 마치 화산이 터지듯이 폭발한 것이고요. 해방과 6·25 이후에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구축되잖아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체제 경쟁이 심화하던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공 업무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정당성이 없던 정권이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작 간첩 사건 같은 것들도 많이 발생했죠. 전두환 대통령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심해지는 국민들의 개헌 요구를 누르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박종철 사건이 터진 거죠. 이와 같은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이 남영동 대공 분실에 대한 세간의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남영동 대공 분실은 우리 경찰이 앞으로도 반면교사로 삼으며 보존해야 할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에 현재의 '경찰청 인권센터'가 들어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찰의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됐는데, 수사구조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 중의 하나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 부족이었어요.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지면 과거보다 경찰에 힘이 실리는 만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국민에 대하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잘못 중 하나가 과거 국민에 대한 탄압 행위가 많았다는 것인데, 여기에서 비롯된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을 없애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야겠다는 지휘부의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 경찰청 인권센터가 이전해옵니다. 경찰이 여기를 관리하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던 장소를 보존하면서 과거의 경찰의 잘못을 알리자라는 결단이 있었던 거죠.

현재 경찰청 인권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가요?

크게 인권보호계와 인권조사계가 있어요. 인권보호계는 경찰 인권 업무의 전체적인 조정·총괄·기획을 담당합니다. 이외에도 시민들로 이루어진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시민참여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기구에서 하는 권고들을 관리하고, 반복되는 권고가 있으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 참여 문화 행사도 계속하고 있어요. 인권 영화제, 인권 아카데미 등이 있죠. 인권 영화제는 경찰관들이나 시민들이 각자 만든 인권 단편 영화들을 모집하여 시상하고 상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경찰관들이 협업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참여하는 경찰관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인권 교육도 되죠. 그리고 영화가 만들어지면 그걸 교육포털사이트에 올려서 다른 경찰관들도 보고 인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취지로 설립된 프로그램입니다. 인권 아카데미는 논의가 활발한 인권 주제를 하나 선정

하고,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민들과 경찰관들이 강의를 같이 듣고, 주변 명소들도 탐방하는 2일짜리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인권조사계에서는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구제·상담 등을 하고, 2014년도부터는 성희롱 신고 상담 센터를 만들어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도 담당하고 있고요.

경찰관은 인권을 수호해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을 인권을 지닌 존재이기도 한데요, 경찰청 인권센터가 경찰관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있나요?

현장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가 경찰관들 인권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활동할 때는 국가로서 활동하는 거잖아요. 경찰을 대하는 국민들도 당연히 국가로 생각하는 거고요. 제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의 인권을 시민들한테 주장할 게 아니라, 공권력 행사자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역할이죠.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경찰관이 제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공권력 행사자로서 경찰의 책무를 중요시하는 동시에, 경찰 또한 하나의 시민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내용을 경찰관 인권교육에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올해 처

음으로 참여형·토론행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의 기본권의 주체다"라는 인식을 경찰관들이 가지도록 함을 목표로 하는 있어요. 이러한 인식을 경찰관들이 먼저 가져야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 저희가 운영하는 성희롱 신고 상담 센터도 내부에서의 갑질·성희롱·성폭행 등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니 그것도 경찰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이죠.

마지막으로 경찰대학 학생들처럼 인권 경찰의 명맥을 이을 예비 경찰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아주 우연히 경찰이 됐고, 경찰 안에 들어와서야 경찰에 대한 애정이 생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이 다른 경찰대 학생들, 경찰을 10대 후반부터 꿈꿨던 사람한테 제가 어떠한 조언을 할 자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하자면, 여러분들이 "경찰은 이익에 있어서 국민을 앞설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새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경찰이 고생하는 거 알고 저도 정말 답답하지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내부에서 뭉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걸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죠. '제복 입은 나'의 눈보다는 '제복 입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으로 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1학년 김정현 기자 20180017@police.ac.kr)

객관적으로 내 마음 바라보기 <마음아, 넌 누구니> 서평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청년들의 우울증 심각...'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몇 번쯤은 들어봤을 말들이다. 6·25 전쟁 후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한국은 2003년부터 12년간 OECD국가 중 가장 자살률이 높은 국가였다. 또한 청년층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것을 보아 왔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의 마음의 병은 몸의 질병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몸에 근육이 있듯이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며, 마음의 병의 치료법은 감정을 있는대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 경찰대학 외래교수 박상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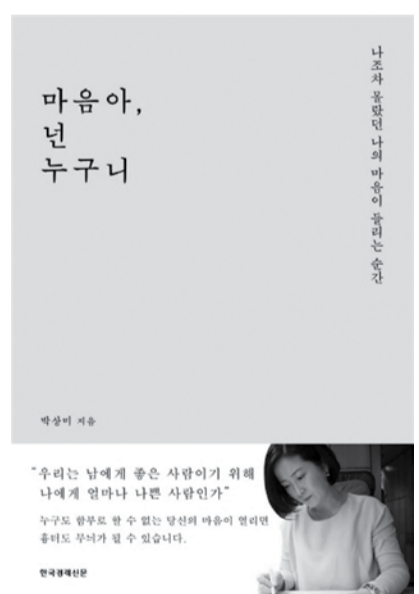
저자인 박상미 교수는 청소년기에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상담센터를 다녀도 낫지 않았고,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자기치유였다. 문학치유, 영화치유에 집중하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힘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후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글을 쓰고 있다. 현재 법무부 교화방송국에서 재소자들의 마음치유 수업을 하고 있고, 치유공간

<더공감 마음학교>의 대표이다.

이 책은 7개의 목차로 구성된다. '관계, 생각과 감정, 사랑과 이별, 상처, 치유, 나, 삶'으로 이어지며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과의 관계, 감정의 문제, 평생을 앓는 사랑과 이별, '가슴 속 울고 있는 어린아이'로 표현되는 상처와 이를 치유하는 것,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해 독자들이 해답을 찾아가도록 안내해 준다. 저자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는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솔직히 털어놓을 것을 주문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의 시작부분에 처음 등장해서 책이 끝날 때까지 등장하는 '마음의 근육'이라는 단어가 나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다. 운동해서 몸을 만들 듯이, 마음에서 긍정 에너지를 발산하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는 저자의 말이 나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 주었다.

이 책은 나에게 과거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를 알려주었다. 가슴 깊이 넣어두었던 어릴 적 받았던 상처들을 이 책을 읽으며 다시 한 번 떠올려 보았고, 내 안에서 울고 있던 어린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 도서 <마음아, 넌 누구니>

살면서 심리적인 이유로 한번쯤 상담이나 치료를 생각해보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우울이라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이 책은 독자의 손을 잡고, 두려움을 떨쳐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내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과정을 함께해 줄 것이다. 부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통해 마음의 건강을 찾고, 마음의 근육을 기르기를 바란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걸보기뿐만 아니라, 마음속까지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되었으면 한다.

(2학년 김병준 기자 kbj33333@police.ac.kr)

음식 권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현재 '먹방공화국'

지금의 대한민국은 '먹방공화국'이다. 최근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일으켰던 품절대란은 먹방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한다. 한편, 먹방의 영향력만큼이나 그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는 최근 먹방에 대한 규제 의지를 시사했다. 일각에서 '푸드 포르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먹방을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규제에도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다. 왜 사람들은 먹방에 열광하는 것일까?

먹방의 흥행 원인에는 '익숙함'과 '대리만족'이 있다.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반복해오던 행위이다. 그렇기에 시청자들은 거부감 없이 먹방을 접하게 되고, 그것을 자신과 연관 지으며 매력을 느끼게 된다. 때론 사람들은 먹고 싶은 음식을 항상 먹지 못하는 아쉬움을 해소하고자 먹방을 찾는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여주는 화면 속 방송인들을 보며, 시청자들은 간접적으로 포만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먹방의 힘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 2018년 9월 경찰대학생 1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약 85%가 먹방을 시청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그 중 70%가 먹방을 다시 찾아보게 되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자극하여 그들을 끌어들이는 먹방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부정적 식품관을 조장하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개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 비관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주도로 발표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을 위하여 2019년까지 폭식을 조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동일한 설문조사 결과, 75%의 학생들이 정부의 조치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폭식 조장을 우려해 먹방을 규제하는 것은 시청자들의 선별 능력을 간과하는 행위이고, 불필요하게 방송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공감 없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먹방은 분명 매력적이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아이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 역시 존재한다. 먹방은 시청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자극적인 소재를 사용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이 그들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먹방의 긍정적 효과를 살리되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모두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1학년 최태영 기자 20180093@police.ac.kr)

'이것도 예술이야?' MoMA가 답하다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만난, 괴상하고 난해한 작품들

2018년 9월 15일, 교환학생으로 거주 중인 코네티컷 주의 뉴헤이븐 시에서 2시간가량 버스를 타고, 휘황찬란한 타임스퀘어와 거리들을 지나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목적지인 'Museum of Modern Art'에 도착했다. 외관부터 그 존재감을 과시하는 다른 박물관들과 달리 뉴욕 현대미술관은 주변의 빌딩들 속에 섞여 'MoMA' 라는 간판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맨해튼의 한 복판에 위치한 뉴욕 현대 미술관은 1929년 근대 예술을 미국에 보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폐허가 된 후 새로운 미술을 실험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중심지가 되었다. 18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5만 점이 넘는 소장품이 있어 그야말로 '근·현대 미술의 성지'라 할 수 있다. 뉴헤이븐 대학에서 수강 중인 'Contemporary Art' 수업에서 다룬 작품들을 만나고 생각하니, 미술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이 설렜다. 하지만 유명한 작품들을 직접 보겠다는 감동도 잠시, 수업 시간에 느꼈던 당혹감이 다시 나를 덮쳐왔다. '이것도 예술인가?',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MoMA에서의 내 얼굴에는 수많은 표정이 엮였다. 찌푸림으로 만났다가 그 의미를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작품도 있었고, 끝내는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젓게 되는 작품도 있었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뒤상과 뉴먼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뒤상의 'Bicycle Wheel'

마르셀 뒤상(1887-1968)은 '샘'이라는 작품으로 확장시절 미술 시대에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사람이다. 'Bicycle Wheel'에서 뒤상은 평범한 부엌 의자 위에 자전거 바퀴를 고정 시킴으로써, 실용적인 두 물건들로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하나의 예술 작품을 창조해 내었다. 이 외에도 삼에 서명을 해서 걸어 둔 작품도 있었다. 전시관 5층에서 다른 추상 표현과 작품들을 둘러보며 붓질에 담긴 감정을 해석하려 애썼다면, 뒤상의 작품들을 만나고서는 그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할 뿐이다. '그림 내가 내 물병에다 사인을 해서 전시해도 예술 작품인가?'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 'Marcel Duchamp, Bicycle Wheel, New York, 1951 (third version, after lost original of 1913) (출처-<http://www.moma.org>)

하지만 이러한 작품이 탄생한 맥락을 살펴보면, 작가의 의도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한 물리적, 심리적 카오스 상태에 대응하여, 미에 대한 전통과 규칙 모두에 비판적이고 회의적으로 접근한 예술가들이 있었다. 이러한 예술운동을 '다다이즘'이라 하며, 뒤상도 그 흐름 속에 위치한다. 뒤상은 'readymade', 즉 작가가 창조해 낸 것이 아닌 이미 대량 생산된 일상용품들을 예술작품이라 명명하였다. 아마 그는 의자와 바퀴의 조합이 '아름답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발견'과 '선택'만으로 예술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예술=시각적 아름다움'이라는 틀을 깨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

뉴먼의 'Vir Heroicus Sublimis'

핵폭탄의 사용, 아우슈비츠 수용소 등 그 규모와 잔인함이 상상 가능한 정도를 넘어섰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존의 체제와 표현 방식에 대한 믿음을 잃은 예술가들은 실존주의, 프로이트의 이론 등 다양한 사상들을 실험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아울러서 추상 표현주의라고 한다. 그 중에는 잭슨 폴록처럼 작가의 움직임을 캔버스에 담아내고자 했던 예술가들도 있었고, 바넷 뉴먼(1905-70)처럼 매우 단순한 색의 조합으로 복잡한 생각과 진실을 드러내려 했던 예술가들도 있었다. 뉴먼(1905-70)의 'Vir Heroicus Sublimis'는 가로 5.1미터, 세로 2.4미터의 거대한 작품이다. 캔버스 전체를 균일한 빨간



▲ 'Barnett Newman, Vir Heroicus Sublimis, 1950-51

색이 뒤덮고 있고, 그가 'Zip'이라 불렀던 선들이 그림을 가로지르고 있다. 이 그림이 전시될 당시에 그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볼 것을 권했다고 한다. 오디오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몇 발짝 앞으로 다가서니, 그림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뿐더러 내 시야가 온통 빨간색에 압도된다. 한밤중 눈을 떴을 때 어둠에 압도된 경험은 있지만, 이렇게 선명한 빨간색에 압도되는 경험은 가히 인상적이었다.

뉴먼은 '뉴욕 타임즈'에 쓴 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우리는 복잡한 생각의 단순한 표현을 선호한다. 우리는 명백한 효과를 가지는 거대한 규모를 선호한다. 또한 우리는 평면적 구성을 선호하는데, 그것들이 환상을 파괴하고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뉴먼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와서 보라고 했는지, 어떠한 진실을 드러내고 싶었는지는 명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작품의 라틴어 제목이 '영웅적이고 숭고한 사람'이라는 점으로 보아 그림 위의 선들이 똑바로 서 있는 인간들을 나타내는 것이

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다른 작품들도 이러한 구성이 나타나는데, 배경과 대조되는 색에 자로 그은 듯 테두리가 뚜렷한 선이 있는 반면, 배경과 비슷한 색으로 거칠게 칠해진 선도 있었다. 선들의 두께와 색, 재료가 다양한 것은 그만큼 다양한 인간상을 그려내고자 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지금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창조해내는 실험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논란을 낳는다. 나 또한 '소변기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머리로는 배우면서도 가슴 한 편에 '이것도 예술인가?'라는 의문을 품고 살아왔다.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만나질 동안 미술관을 헤매고 있는 나의 의문에 MoMA는 답했다. '나도 모른다. 나한테 묻지 마시라. 그건 뒤상이, 뉴먼이, 그리고 내가 정하는 것이다'라고. MoMA에서 만난 예술가들은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술을 정의하고 있었고, 그것이 단지 의자위에 올려둔 자전거 바퀴이거나 온통 빨간 색 뿐인 캔버스일지라도 그 맥락과 의도에 공감하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도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었다. 예술의 정의에 대해 거창한 답을 내릴 순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예술이 나에게도 예술이 되려면 작품 이면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3학년 송채은 기자
20160047@police.ac.kr)

삶의 자세로써 실천하는 채식, 사람들은 왜 무엇을 어떻게 채식하는가

2018년 국제채식인연맹에서 추산한 세계 채식 인구는 1억 8000만 명이며, 국내 채식 인구도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약 100만 명으로 추정된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동물의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며 SNS상 맛집 리스트에 채식 식당이 하나둘 생겨가고, 대중매체를 통해 이효리, 이하늬 등 유명인사가 실천하는 채식주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채식주의자는 신기하고 놀라운 대상이며, 일상생활에서 아무 문제 없이 수용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았다. 2018년 상반기에 경찰대학의 수탁교환학생이었던 락토 채식주의자(우유와 유제품은 먹는 채식주의자) Shivalika 학생의 말을 인용하자면, "메인 반찬으로 나오는 육가공품을 제외하고도, 대부분 요리에 육수가 기본이 되고, 나물에도 젓갈 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선별해 먹어야 한다. 하지만 채식주의자를 위한 요리인지 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먹기 전에 일일이 식자재를 물어보아야 하고, 물어보더라도 확실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서 불편했다. 이 과정이 나 혼자에게만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식사를 같이하는 친구들에게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같이 모임을 하기 미안했다. 또한 나는 종교 때문이 아니라 동물을 위하여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채식주의자라 하

면 꼭 막힌 사람, 까다로운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채식의 동기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한다면 뚜렷한 동기와 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종교의 영향력이 약화된 현대에 채식주의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건강상의 이유와 윤리적 이유를 들 수 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채식 위주의 식단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왔다. 식물에는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이 없고 식물성 지방은 주로 단일불포화지방, 다가불포화지방이기 때문에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식물의 수용성 식이 섬유는 콜레스테롤이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게 한다.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낮아져, 당뇨병 또는 당뇨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좋다.

채식주의자가 되는 윤리적 이유는,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철학적 사유에서 비롯한다. 피터 싱어는 '동물 해방'이란 책에서 종 차별에 반대하며 공리주의를 동물들에게까지 확대 적용하여,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들에게 그에 합당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주

장한다. 인간과 같은 수준의 평등은 아니지만,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며 육류 생산을 위한 소모품으로 착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육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장식 대량 축산을 통해 식탁에 오르는데, 이때 동물들은 잔인하게 학대당하기 일쑤이다. 동물들은 비좁은 공간에서 밀집되어 움푹달랴 못 하며 배설물과 뒤섞여 비위생적으로 사육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살해된다. 고환, 꼬리, 부리 등 신체의 일부를 절단되고, 성장이 더디거나 질병에 걸리면 도살되며, 인간이 사육하기에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생존을 강요당한다.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산된 육류를 소비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폭력적인 구조에 가담하게 된다.

추가로, 밀집된 공간에서 비위생적으로 사육되는 가축들 사이에 전염병이 퍼지거나, 새로운 질병이 탄생할 수도 있는 것도 문제이다. 채식

주의자는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데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채식을 실천한다.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식을 하나의 식사 습관으로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식하는 법

영양학적으로 보았을 때 채식주의는 영양부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성장 부진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기 위해 곡류, 콩류, 견과류, 씨앗류로 다양하게 식단을 짜야 한다. 하지만 콩류에는 메싸이오닌 아미노산이 없고, 곡류에는 라이신이 없어, 식물 단백질만으로는 필수 아미노산(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외부에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만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의 섭취가 어렵다. 또한 채식으로는

리보플래빈, 비타민D, 비타민 B-12, 철분, 아연, 요오드, 칼슘 등 미량 영양소의 섭취가 어렵다. 따라서 식품영양학자들은 채식할 때 영양 보충제를 먹는 것을 권유한다.

한편 채식은 식품뿐만 아니라 의류, 화장품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된다. 털, 가죽, 실크, 진주 등 동물성 소재 대신 인조 원료로 디자인한 비건 패션과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 유해성분이 없고, 안정성 검증을 위해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비건 화장품만을 소비하는 것이다.

채식주의자는 곧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채식주의자가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일상생활에서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포용이란 자신과 다른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누리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하나의 생활 속에서 다른 방식들이 조화롭게 녹아 들어가는 것이다. 주위에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윤리적 다짐의 실천으로 채식주의자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식단을 존중하고 채식주의자와 비채식주의자가 같은 식탁에서 불편함 없이 수저를 들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채식주의자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 알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2학년 노영민 기자
20170033@police.ac.kr)



▲ 비건(vegan)은 고기는 물론 우유, 달걀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를 뜻함



▲ 육류 대신 콩과 두부가 들어간 채식 비빔밥